감사원 '국정농단' 관련 공무원 28명 징계 요구

"공직사회 잘못된 관행에 경종"… 블랙리스트 피해 444건도 확인

감사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마사회, 관광공사 등의 직원 2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전모와 피해 규모도 드러났다.

감사원 신민철 제2사무차장은 13일 최순실 등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와 관련, "징계 범위와 수위를 정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며 "상급자 지시를 따르는 공무원 분위기상 징계를 과하게 하면 복지부동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위법·불법행위를 했는데 징계를 안 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신 차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진행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해 법령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한 관련자에게 징계를 요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와 문체부 안에서 실무자들이 따르지 않을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하지만 나머지 사안들은 청와대가 가볍게 얘기를 하거나 김종 전 문화부 차관이 혼자 지시했는데 담당자들이 법률검토도 안 해보고 일방적으로 이행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복종의 의무를 규정한다. 하지만 공무원행동강령에는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하면 따르지 않게 돼 있다.

감사원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승인문제와 블랙리스트 사건 등 각종 위법·불법행위와 관련해 문체부 19명을 포함해 한국마사회와 한국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광공사, 마사회 공무원 등 총 2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또 문체부와 산하기관은 대통령비서실(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시에 따라 특정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배제하는 데 체계적이고, 끈질기게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리스트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체부 산하 10개 기관의 지원사업 심의위원 후보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피해를 본 사례는 총 444건에 달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가 배제한 사례가 364건으로 가장 많았다. 444건을 영역별로 보면 문화·예술 부문 417건, 영화 5건, 출판 22건이다.

감사원이 파악한 경위를 보면 2013년 9~11월 문화예술계의 정치적·이념편향적 작품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슈화되자 문화체육비서관실은 문체부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문체부에 관련자 징계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등 문체부 산하 4개 기관장에게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차별하고 위원회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심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사드 배치 정찰 북 무인기 지난 9일 강원도 전방 지역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군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까지 정찰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왼쪽〉. 북한 조선중앙TV가 성주골프장의 사드 배치 전경을 담은 위성사진이라며 지난 5월 8일 공개한 사진. 중앙TV는 X-밴드 레이더(검은 원 표시)가 성주골프장의 서쪽 능선 부근에 배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 '관리대상' 7개 산단 분양률 5.8%P 상승

평균 32%… 투자유치 안간힘
9월 수도권 기업 대상 설명회

분양 부진으로 '관리 대상'에 오른 전남 일부 산단의 분양률이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들은 경기침체 등으로 불투명한 투자유치 전망 속에 상승세를 이어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가 5개, 일반 32개, 농공 68개 등 전남 105개 산단의 분양률은 92.1%에 달한다.

이 가운데 7개 산단은 분양률이 50%에 못 미쳐 관리대상에 올라있다. 이날 현재 7개 산단 분양률은 32.1%로 그나마 지난해 말(26.3%)보다는 5.8% 포인트 상승했다. 장흥 바이오 26.0%, 강진 9.7%, 목포 대양 27.8%, 목포 세라믹 23.0%, 나주 혁신 28.6%, 담양 17.4%, 영광 대마 48.3%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에는 바이오 19.1%, 강진 4.2%, 대양 18.1%, 세라믹 27.1%, 혁신 33.1%, 담양 29.8%, 대마 45.8%였다.

일부 산단 분양률은 계약 철회 등으로 분양률이 뒷걸음질 치기도 했다. 특히 장흥과 강진 산단은 분양 개시 시점이 각각 2010년, 2014년인데도 분양이 부진해 자치단체 등이 집중관리에 나섰다.

장흥·강진군, 전남개발공사,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전남테크노파크 등 관련 기관은 최근 2개 산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방 투자의 장점이 일부 상쇄되고 경기침체에 따라 떨어진 기업 투자 의지 등은 분양률 상승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오는 9월 수도권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가뭄 장기화 … 전남도, 숲 가꾸기도 비상

수목 물주기 등 피해 최소화

전남도가 최근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 봄철 숲 조성지를 일제히 점검하고 '가뭄 피해 예방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전남지역 평균 누적 강수량은 192mm로 평년의 3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기상청이 장기 전망에서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가용 인력과 관수 장비를 총동원해 가뭄에 따른 수목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일선 시·군에 가뭄 단계별 수목 관리와 수목 보호를 위한 가용인력 및 관수장비 확보, 가뭄 피해 예방 대책반을 편성토록 하는 '가뭄 피해예방·복구대책'을 시달하고 가뭄 장기화에 대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봄철 숲 조성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급수차·양수기 등 관수장비 146대를 투입해 도심과 생활권 주변 숲 270여 곳에 800여 회의 물 주기 작업을 실시했다.

가뭄으로 각종 병해충 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수목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병해충 예찰도 강화하는 한편 병해충에 의한 수목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정부 "위안부 합의에도 피해자 개인청구권 유효"

국내 소송 과정서 법원에 입장 서면 제출

일본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 12월 28일)와 상관없이 살아있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가 수립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위안부 합의 관련 국내 손배 소송의 원고 측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말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포함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과 관계없이 피해자 개인들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정부가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05년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 문서 공개 후 한일청구권협정(1965년)의 효력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서 위안부 문제처럼 일본 공권력이 관여한 반(反)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결론냈다.

그에 따라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은 위안부 피해자 개인의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한편 청와대는 13일 정현백 여성부 장관 내정자를 공식 발표하면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거론했다가 50분 만에 해당 발언을 취소하기도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15분께 정 후보자 내정 사실을 발표하면서 발탁 배경으로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 긴급한 현안도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은 물론 정부가 재협상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었다. 하지만 박 대변인은 공식 발표 50여분 만인 오후 3시 5분께 이를 수정 발표했다.

외교부 역할인 재협상 문제를 여성부 장관 발탁 배경과 연결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과 함께 자칫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공식화하는 데 따른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12일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일본 자민당 간사장을 만나 위안부 합의에 비판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평생학습도시' 공모 영광군·완도군 선정

교육인적자원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17년 평생학습도시 조성' 공모사업에서 영광군과 완도군이 선정됐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는 전국 24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해 치열한 경합을 벌인 결과 전국 10곳 중 전남 지역 2곳이 최종 선정됐다.

영광군과 완도군에는 올해 국비 9000만원이 지원되고, 다음해부터는 매년 특성화사업 신청을 통해 5000만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된다.

영광군은 4대 종교 역사 해설가 양성, 신재생에너지 지도사 양성, 에너지 캠프,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군은 해초라떼 바리스타 양성, 80?90세대 특화강좌, 행복학습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활동가 양성사업 등에 나서게 된다. /윤현석기자chadol@

고흥 도양산단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예정지도

고흥 도양 일반산업단지와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예정지가 앞으로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전남도는 13일 "고흥 도양읍 봉암리 일원 도양 일반산업단지와 영남면 남열리 일원의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예정지 3.13㎢에 대해 18일부터 2020년 6월 1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고흥 도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개발사업 시공사 확정을 위한 세부 내역을 협의·진행 중이다. 기반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개발사업은 현재 토지 보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부지 내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해선 국방부와의 협의를 모두 완료, 사업 착수를 앞두고 있다.

도양 일반산업단지는 운송장비 제조업 및 관련 산업이,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에는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18홀 규모 골프장, 마리나항 조성, 상가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 사업지구 일원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토지거래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 협의 지연과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